

제2부 선거기사 심의의결 현황

제1장 결정의 내용별 분석

1. 주 의
2. 경 고
3. 반론보도
4. 정정보도
5. 기 각

제2장 매체별 위반사례 분석

1. 중앙일간신문
2. 지방일간신문
3. 시사주간지, 주간신문, 월간지, 통신

제3장 심의대상기사의 위반 유형별 분석

1. 기사내용
2. 제 목
3. 여론조사
4. 사 진

제1장 결정의 내용별 분석

6·13 전국동시 지방선거와 관련,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자체심의와 피해자(후보자 및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시정요구 및 반론보도 청구시 심의로 구분하여 진행되었다.

자체 심의는 심의위원회의 전체 회의에 앞서 실무팀에서 대상매체(일간신문 86개, 지방주간신문 299개, 시사주간신문 23개, 월간지 5개, 통신 1개 등 414개)의 선거기사 내용을 분석한 후,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와 선거기사 심의기준을 위반한 기사를 가려내 심의위원회에 회부하는 절차를 거쳤다.

2002년 2월 14일부터 7월 13일까지 15차례 회의를 개최한 심의위원회는 자체심의안건 56건을 심의한 결과 10건에 대해 불문처리하고, 나머지 46건에 대해서 주의 또는 경고결정을 내렸다. 46건 중에는 주의가 34건으로 73.9%, 경고가 12건으로 26.1%를 차지했다.

주의 또는 경고결정을 받은 46건의 기사를 위반 유형별로 분류하면,

- ①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 33건(71.7%)
- ② 여론조사 보도요건 준수 위반 11건(23.9%)
- ③ 여론조사결과 보도금지 위반 2건(4.4%)으로 나타났다.

매체별 위반건수를 보면,

중앙일간신문이 9건으로 공정성 및 형평성 2건, 여론조사 보도요건 미비 5건, 여론조사결과 보도금지가 2건이었다.

지방일간신문은 27건의 위반기사 중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이 2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여론조사결과 보도 요건미비는 4건이었다.

이 밖에 시사주간신문은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이 1건, 지방주간신문은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이 6건, 여론조사 보도요건 미비가 1건이었고, 월간지는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과 여론조사 보도요건 미비가 각각 1건씩 나타났다.

이러한 위반기사에 대해 심의위원회는 주의 34건(73.9%), 경고 12건(26.1%)의 결정을 내렸다.

중앙일간지의 경우 주의 6건, 경고 3건이었는데 그중 여론조사 보도요건 미비가 5건(주의 4건, 경고 1건), 여론조사결과 보도금지가 2건(주의)으로 여론조사관련 위반사례가 7건이었으며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은 2건(주의)뿐이었다.

중앙일간지와는 대조적으로 지방일간지는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이 대부분이었는데 27건 중 3건만 경고, 24건은 주의결정이 내려졌다.

이는 제 16대 총선을 앞두고 발족한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2000년 2월 25일부터 4월 17일까지 52일 동안 자체 심의하여 주의 35건(37.6%), 경고 58건(62.4%) 등 93건의 결정을 내린 것과 비교하면 선거

기사를 다루는 우리 언론매체들의 제작정신이 성숙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자체심의 외에 기사내용에 피해당사자가 해당언론사를 상대로 정정보다나 반론보도를 요구하면서 심의위원회에 시정을 요구한 사례는 10건이었는데 일간신문이 중앙지 1건, 지방지 4건으로 5건이었으며 지방주간신문이 5건이었다.

심의위원회는 시정요구 접수시 안전심의에 앞서 시정요구인과 피시정요구인(언론사 대리인)의 진술을 들은 후 안전을 심의하는 절차를 거쳤는데 심의결과 정정보도문 게재 1건, 반론보도문 게재 1건, 주의 2건, 기각 2건 결정을 내렸으며 4건이 취하되었다. 심의기간 중 언론사들의 선거보도 건수에 비해 피해당사자들의 시정요구가 적었던 것은 언론사들이 자체적으로 공정정보도준칙을 마련하여 선거보도에 신중을 기한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1. 주 의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자체심의를 통해 심의기준을 위반한 46건의 기사 중 73.9%인 34건에 대해 주의결정을 내렸다.

경고보다 주의결정이 거의 3배 이상 많은 현상은 심사기준의 완화보다 선거보도에 대해 언론사 자체적으로 공정정보도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 같다. 참고로 16대 총선 당시 위원회가 내린 결정은 주의보다 경고가 많았다.

매체별로 보면 중앙일간신문 6건, 지방일간신문 24건, 지방주간신문과 월간지가 각각 2건이었다.

유형별로 분석해보면 공정성 및 형평성을 위반한 기사가 24건(71%)으로 가장 많았고, 여론조사결과 보도요건미비 기사가 10건(29%)이었다.

주의결정을 받은 기사의 유형별 위반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가.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 <표 1>

중앙일간신문은 24건 중 2건에 불과했으나 지방일간신문은 20건이나 되었다.

주의결정을 받은 기사들의 내용은 대부분 특정 후보를 의도적으로 도와주거나 비판하는 강도가 비교적 약한 기사였는데 지방일간신문의 경우 특정 후보에 대한 인터뷰나 출판기념회 기사를 다루면서 다른 후보보다 부각시키는 사례가 많았다.

<주 의>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

<표 1>

안 건 번 호	매 체 명	보 도 일 자	게 재 면	제 목
2002-자심-2	동양일보	2002. 2. 15.	14면	권오창 현 군수·한나라 공천자 '2파전' 예상

안 건 번 호	매 체 명	보 도 일 자	게 재 면	제 목
2002-자심-3	대구일보	2002. 2. 16.	3면	박군수 “누구든 덤벼” “정군수 경쟁자 없다”
2002-자심-4	충청매일	2002. 2. 18.	15면	김무환 자민련도지부 사무처장 부여군수 출마 “풍요로운 부여 건설위해 주력”
2002-자심-9	월간조선	2002. 3월호	304, 305면	김진선 지사, 「누가 나와도 상대가 안된다」
2002-자심-11	경북매일	2002. 2. 25.	5면	한나라 공천따라 ‘무투표 당선’
2002-자심-12	경북매일	2002. 2. 25.	5면	박진규 현 시장 ‘독주채비’ 갖춰
2002-자심-13	서울동부신문	2002. 2. 22.	3면	“여성정치참여는 미래에 대한 투자”
2002-자심-18	경북매일	2002. 3. 5.	4면	‘한나라 공천 = 당선’ 이번 없을 듯
2002-자심-19	영남일보	2002. 3. 7. 2002. 3. 8. 2002. 3. 11.	4면 4면 5면	6·13 지방선거
2002-자심-20	수도권일보	2002. 3. 8.	2면	경기광역의원 선거 풍향
2002-자심-24	호남신문	2002. 3. 11. 2002. 3. 13.	3, 5면 3면	허지사 오늘 경선출마 공식선언 정동녕 청장 12일 출판기념회 등
2002-자심-26	대구일보	2002. 3. 14.~16. 2002. 3. 18.~20.	3면	6·13 지방선거마당
2002-자심-27	영남일보	2002. 3. 13, 15, 16, 18, 19.	4면	6·13 지방선거
2002-자심-29	국제신문	2002. 3. 22.	5면	부산 첫 여성구청장 나올까
2002-자심-30	충남일보	2002. 3. 27.	3면	아산시장후보 2파전 압축
2002-자심-31	호남매일	2002. 3. 27.	7면	신안군 민주공천 = 당선
2002-자심-33	경상일보	2002. 4. 2.	1, 3면	박맹우 시장후보 확정 등
2002-자심-36	매일경제	2002. 4. 25.	51~53면	도전 6·13 지방선거
2002-자심-37	내일신문	2002. 4. 18.	22면	현역 아성 도전할 새 인물 없다
2002-자심-39	전북일보	2002. 5. 8.	1~3면	강현욱 후보 35표차 ‘극적 승리’ 등
2002-자심-44	울산매일	2002. 5. 25.	1, 2면	“행정경험 박맹우 후보 우위” 등

안 건 번 호	매 체 명	보 도 일 자	게 재 면	제 목
2002-자심-49	대구일보	2002. 5. 29.	4면	대구경북 광역단체장 후보등록 첫날 등
2002-자심-50	전북일보	2002. 5. 31.	3면	"전북 살리려면 제대로 인물 뽑아야"
2002-자심-52	제주일보	2002. 5. 30.	21면	후보마다 "내가 적임자"

나. 여론조사 보도요건 미비 <표 2>

모두 10건이 주의결정을 받았는데 중앙일간신문 4건, 지방일간신문 4건, 지방주간신문 1건, 월간지 1건이었다.

주의결정을 받은 기사에서 중앙일간신문은 여론조사 위반사례 내용이 많은 반면, 지방일간신문은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이 대부분이었다는 점은 주목해야 할 것 같다.

<주 의> 여론조사 보도요건 미비

<표 2>

안 건 번 호	매 체 명	보 도 일 자	게 재 면	제 목
2002-자심-1	내일신문	2002. 2. 14.	3면	한나라당 손학규 독주태세 민주, 임창열 우위 속에 김영환 도전
2002-자심-8	월간조선	2002. 3월호	302, 303면	한나라당 손학규 의원 여론조사 1위 질주. 임창열 지사 민주당 공천 받을지가 관심
2002-자심-22	시민일보	2002. 3. 12.	3면	서울시민 정당지지도 한나라 31.8%, 민주 23.6% 홍사덕 의원 무소속 출마땀 2, 3위권에 머무를 듯
2002-자심-25	남해뉴스	2002. 3. 7.	4면 5면	운영위원회 결정이 사실상 변수, 편가르기 등 심각한 후유증 예상
2002-자심-34	경상일보	2002. 4. 23.	1, 3면	한나라-민노당 시장선거 대접전 등
2002-자심-35	한라일보	2002. 4. 22.	25면	'마지막 승부수'
2002-자심-38	광주타임즈	2002. 5. 2.	1면	광주시장 이정일 · 전남지사 박태영씨 선두
2002-자심-40	한국경제	2002. 5. 14.	8면	6 · 13 지방선거 D-30 민주, 영남진출 관심집중

안 건 번 호	매 체 명	보 도 일 자	게 재 면	제 목
2002-자심-42	한국경제	2002. 5. 22.	8면	6·13 지방선거 D-22 부산시장
2002-자심-43	조선일보	2002. 5. 25.	8면	6·13 지방선거 판세 전국 기초단체장

2. 경 고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자체심의를 통해 심의기준을 위반한 총 46건 중 26.1%인 12건에 대해 경고결정을 내렸다.

매체별로 보면 중앙일간신문 3건, 지방일간신문 3건, 시사주간신문 1건, 지방주간신문이 5건이었다.

중앙일간지의 경우 전체 위반기사 9건 중 경고결정이 3건으로 이들 모두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이 아닌 여론조사보도와 관련돼 경고결정이 내려졌다는 것은 주목할 사례라 하겠다.

지방일간신문의 경우 27건의 전체 위반기사 중 3건만 경고결정을 받았는데 중앙일간지의 33.3%에 비해 11.1%밖에 되지 않았다.

지방일간지와는 달리 지방주간신문은 7건의 위반기사 중 5건이 경고결정을 받았는데 모두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으로 나타났다.

경고결정을 받은 기사의 유형별 특징은 다음과 같다.

가.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 <표 3>

- 1) 출마예정자의 출판기념회를 집중보도, 선거에 영향을 주는 경우
- 2) 출마가 확실한 현 단체장의 업적을 지나치게 확대 보도하는 경우
- 3) 후보자의 인터뷰 기사를 통해 경쟁후보를 비난하는 내용을 집중 보도하는 경우
- 4) 특정 정당을 강하게 부각시켜 공천자를 간접 지원하는 경우
- 5) 특정 후보는 사진과 함께 상자기사로 크게 보도하면서 다른 후보는 작게 보도하는 경우
- 6) 선거초반부터 양자 대결구도로 보도하여 타 후보들에게 불리하게 보도하는 경우
- 7) 특정 후보를 유리하게 하기 위해 특정 정당에 대한 여론조사를 크게 보도하는 경우
- 8) 출처불명의 여론조사를 인용해 특정 후보를 유리하게 또는 불리하게 하는 경우

나. 여론조사 관련 위반 <표 4>

여론조사관련 위반결정은 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 공표금지등) 제1항과 제

4항, 그리고 선거기사심의기준 제8조(여론조사보도)의 규정에 따라 심의하였다.

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108조 제1·4항과 선거기사 심의기준 제8조는 선거기간 개시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 시각까지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케하는 여론조사결과 보도를 금지하고 있으며, 여론조사 보도금지 기간이 아닌 때에 여론조사결과를 보도할 경우 조사의뢰자, 조사기관,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등 여론조사의 요건을 모두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에 따른 여론조사관련 위반기사는 13건으로 여론조사 보도요건 미비가 11건, 여론조사결과 보도금지는 2건으로 나타났다.

그중 경고는 3건으로 여론조사결과 공표금지 2건, 여론조사 보도요건 미비 1건이 모두 중앙일간지였다.

여론조사기사의 위반 내용은 주로 특정후보를 지지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근거가 불확실한 여론조사를 인용하는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경 고〉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

〈표 3〉

안 건 번 호	매 체 명	보 도 일 자	게 재 면	제 목
2002-자심-14	경상일보	2002. 2. 27.	3면	1천여 명 성향 ... 선거출정식 방불
2002-자심-23	경남시사신문	2002. 2. 6.~19.	1, 14, 15면	지역민이 승리하는 새로운 역사 만들겠습니다"
2002-자심-28	안산포커스	2002. 3. 7.	4면	젊은 안산시장 역설
2002-자심-41	강원리뷰	2002. 5. 20.~26.	14, 15면	김지사 재선 '영동권 단결 한 목소리'
2002-자심-45	통영시민신문	2002. 4. 26.	12면	통영 도의원 출마자에게 듣는다①
2002-자심-46	울산종합신문	2002. 5. 1. 2002. 5. 17.	4면 3면	"찾고 싶고, 머물고 싶은 울주로" 등
2002-자심-51	경인매일	2002. 5. 31.	5면	6·13 지방선거 격전지를 가다
2002-자심-54	울산매일	2002. 6. 6.	1, 2면	"울산서 정권교체 시작하자" 등
2002-자심-56	월요신문	2002. 6. 16.	54, 55면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경제활성화 이뤄졌다"

〈경 고〉 여론조사 보도요건 미비

〈표 4〉

안 건 번 호	매 체 명	보 도 일 자	게 재 면	제 목
2002-자심-7	세계일보	2002. 2. 22.	28면	시장님 시장님 '철새' 시장님

〈경 고〉 여론조사결과 공표금지

〈표 4〉

안 건 번 호	매 체 명	보 도 일 자	게 재 면	제 목
2002-자심-48	조선일보	2002. 5. 29.	5면	6·13 지방선거 / 격전현장 - ①울산
2002-자심-53	세계일보	2002. 6. 3.	9면	서울, 이명박 - 김민석 접전 6·13 선거 중간판세 점검

3. 반론보도

지역주간신문인 가평신문은 6월 1일자 1면에 한나라당 가평군수 후보가 여성당원을 협박하고, 한나라당 국회의원 정병국씨도 동행하였다는 보도를 하자 피해자측에서 사실과 다르다며 정정보도를 요구한 건이었다.

심의위원회는 수사진행중인 사건이라는 이유를 들어 정정보도 게재가 아닌 반론보도 게재결정을 내렸다.

4. 정정보도

대한매일은 민주당 전북지사후보 경선과 관련, 4월 26일자 사회면에 경선자로 나선 정세균 의원이 차명계좌를 이용, 비자금을 세탁해 선거자금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의혹성 보도를 하자 사실이 아니라며 정정보도 및 사과문 게재를 요구한 건이었다.

1차 심의에서는 대한매일측이 정정기사를 게재하겠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유예결정을 내렸지만, 대한매일이 당사자간 합의사항을 이행치 않아 2차 회의에서 정정보도문 게재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대한매일은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당하였다. 대한매일의 기사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 경선 결과 시정요구인 정세균 의원은 35표차로 낙선되었다.

이 건의 경우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대한매일이 정정보도를 하였지만 경선이 지난 뒤였다. 심의위원회의 결정도 5월 7일 경선이 끝난 후인 5월 10일 정정보도 결정을 내림에 따라 결과적으로 시정요구인의 명예를 어느 정도 회복시켰는지는 몰라도 정정보도가 경선에 영향을 주지는 못하였다.

이 건을 계기로 심의위원회 결정이 시급하게 요구되는 선거기사의 경우 실질적으로 피해자를 구제한다는 취지에서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회의일정을 잡아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5. 기 각

시정요구에 대해 심의위원회가 기각결정을 내린 것은 2건이었는데 국제신문이 함양번영회 및 함양지역 노동자연대와 시민단체가 범군민정의실현 연대 결성식을 갖고 부정선거 감시 및 부도덕후보 표 안

주기 운동에 나섰다는 보도를 하자 한나라당 함양군수 후보가 자신을 겨냥한 기사라고 주장, 정정보도를 요구하였다.

심의위원회는 기사내용의 부도덕한 후보가 시정요구인이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리고 기각시켰다.

그리고 주간 영광·함평 내일신문이 영광군수선거와 관련, 특정인이 3자, 5자 가상대결시 지지률에 있어 앞서고 있다는 여론조사결과를 보도하면서 3자 대결에 자신을 포함시키지 않은 것은 자신의 지지도를 급락케 하려는 의도성이 깔려 있었던 것이라며 정정을 요구했으나 심의위원회는 여론조사 질문내용은 조사기관의 임의적 결정사항이라고 결론짓고, 기각결정을 내렸다.

제2장 매체별 위반사례 분석

자체심의 대상매체는 일간신문이 86종(중앙지 27종, 지방지 59종), 통신 1종, 지방주간신문 299종, 시사주간지 23종, 월간지 5종이었다.

이중 중앙일간신문은 18.5%인 5개 신문이 9건을 위반하여 주의 6건, 경고 3건이, 지방일간신문은 59종 중 30.5%인 18개 신문이 모두 27건을 위반하여 주의 24건, 경고 3건의 결정이 내려졌다. 23종의 시사주간지는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으로 경고를 받은 월요신문 1건 밖에 없었으며, 299종의 지방주간신문은 7개 매체에서 주의 2건, 경고 5건의 위반사례가 있었다. 지방주간신문의 경우 6건이 공정성 및 형평성을 위반, 이중 5건이 경고결정을 받았다. 월간지는 5종 중 1개 매체가 2건을 위반했는데 여론조사 보도요건 미비로 주의결정이 내려졌다. <표 5·6>

간행형태별 위반현황

<표 5>

구 분 계 간 별			위 반 유 형					결 정 내 용			
			공 형	정 평	성 성	여 론 조 사 보도요건미비	여 론 조 사 결과공표	상업광고제한	기 타	주 의	경 고
일간신문	중앙	9	2		5	2			6	3	
	지방	27	23		4				24	3	
시사주간신문		1	1							1	
지방주간신문		7	6		1				2	5	
월 간 지		2	1		1				2		
총 계		46 100.0%	33 71.7%		11 23.9%	2 4.3%			34 73.9%	12 26.1%	

매체별 위반현황

<표 6>

구분	매체명	계	위 반 유 형						결 정 내 용		
			공 형	정 평	성 성	여 론 조 사 보 도 요 건 미 비	여 론 조 사 결 과 공 표	상업광고제한	기 타	주 의	경 고
중앙 일간 신문	내일신문	2	1		1				2		
	세계일보	2			1	1				2	

간 별	매체명	구 분	위 반 유 형					결 정 내 용			
			공 형	정 평	성 성	여 론 조 사 보 도 요 건 미 비	여 론 조 사 결 과 공 표	상 업 광 고 제 한	기 타	주 의	경 고
중앙 일간 신문	매 일 경 제	1	1						1		
	조 선 일 보	2			1	1			1	1	
	한 국 경 제	2			2				2		
	소 계	9	2		5	2			6	3	
지 방 일 간 신 문	경 북 매 일	3	3						3		
	경 상 일 보	3	2		1				2	1	
	경 인 매 일	1	1							1	
	광 주 타 임 즈	1			1				1		
	국 제 신 문	1	1						1		
	대 구 일 보	3	3						3		
	동 양 일 보	1	1						1		
	수 도 권 일 보	1	1						1		
	시 민 일 보	1			1				1		
	영 남 일 보	2	2						2		
	울 산 매 일	2	2						1	1	
	전 북 일 보	2	2						2		
	제 주 일 보	1	1						1		
	충 남 일 보	1	1						1		
	충 청 매 일	1	1						1		
	한 라 일 보	1			1				1		
	호 남 매 일	1	1						1		
	호 남 신 문	1	1						1		
	소 계	27	23		4				24	3	
	시사 주간	월 요 신 문	1	1							1
소 계		1	1							1	
지 방 주 간 신 문	강 원 리 뷰	1	1							1	
	경남시사신문	1	1							1	
	남 해 뉴 스	1			1				1		
	서울동부신문	1	1						1		
	안 산 포 커 스	1	1							1	
	울산종합신문	1	1							1	
	통영시민신문	1	1							1	
	소 계	7	6		1				2	5	
월간지	월 간 조 선	2	1		1				2		
	소 계	2	1		1				2		
총 계		46 100.0%	33 71.7%	11 23.9%	2 4.3%				34 73.9%	12 26.1%	

1. 중앙일간신문

조선일보는 월간조선 2건을 포함 4건의 위반사례가 지적되어 경고 1건, 주의 3건의 결정이 내려졌다. 조선일보의 경우 4건 중 3건이 여론조사 관련 위반기사였으며, 여론조사내용을 인용보도하면서 조사의 퇴자, 표본의 크기, 조사일시 등은 물론 언론사의 명칭이나 공표일자도 적시하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특히 5월 29일자 5면의 울산광역시시장선거 기사에서 출처불명의 여론조사결과를 인용하여 한나라당 후보에 유리하도록 보도, 경고결정을 받았다. 울산광역시장 선거의 경우 한나라당후보(박맹우)와 민주노동당후보(송철호)의 격전지로 전국적인 관심이 높았던 선거였다.

세계일보는 경고 2건을 받았는데 모두 여론조사 관련기사였다. 출처불명의 여론조사결과를 인용 보도하여 유권자들의 판단을 흐리게 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내일신문은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 1건과 여론조사 보도요건 미비 1건 등 2건이 지적되었다. 2월 14일자 3면에 경기도지사 선거의 전망 기사를 게재하면서 정당의 후보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나라당 손학규 독주태세』라는 제목을 달아 주의결정이 내려졌다.

한국경제는 주의 2건을 받았는데 모두 여론조사 보도요건 미비였다. 보도내용은 5월 22일 부산광역시장 선거 기사를 시리즈로 다루면서 조사의 퇴자, 조사방법은 물론 조사한 언론기관의 명칭과 공표일자도 적시하지 않은 채, 『안상영 질주... 한이헌 추격』이라는 제목을 달아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매일경제는 4월 25일자에서 인천, 제주, 대전, 충남, 충북, 전북, 부산, 경북, 경남 등 광역단체장 선거 판세를 특집기사로 보도하였는데 부산시장은 『한나라당 후보 당선확률 거의 100%』, 경남지사는 『한나라당 김혁규후보 독무대』라는 제목을 달았으며 기사내용도 한나라당후보를 집중적으로 다루어 다른 후보를 불리하게 한 점이 지적되었다.

중앙시사주간지의 경우 월요신문이 유일하게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으로 1차례 경고결정을 받았는데 인천시장후보 릴레이 인터뷰 기사를 게재하면서 한나라당 안상수 후보만 부각시키고 타 후보는 보도하지 않았다.

2. 지방일간신문

지방일간신문 위반사례는 58개 대상매체 중 31%인 18개 신문에서 27건으로 경고 3건, 주의 24건의 결정이 내려졌다. 특히 27건 중 85%인 23건이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으로 나타나 여론조사 관련기사 위반이 78%인 중앙일간지와 대조적이었다.

지방일간신문의 전체적인 위반사례는 주로 특정 후보를 유리하게 부각시킨 경우가 많았으며, 상대적으로 다른 후보를 폄하하거나 불리한 내용을 보도한 경우는 드물었다.

한편 지방일간신문들의 지역별 위반건수를 보면 대구·경북지역신문이 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울산 지역 5건, 전북지역 2건, 광주지역 3건, 인천·경기지역 2건, 충청지역 1건, 대전·충남지역 2건, 제주

지역 2건, 부산지역 1건, 서울지역 1건이었으며 강원, 전남, 경남지역은 1건도 없었다.

특히 5개 신문이 있는 경남에서는 1건의 위반사례도 지적되지 않아 시선을 끌었다. <도표 1>

지방일간신문의 위반내용 중 특이한 사례는 다음과 같다.

【경북매일】

지방자치단체장선거와 관련 한나라당 공천자와 현직 군수후보를 집중 부각시켜 주의결정.

【경상일보】

특정 후보의 출판기념회를 크게 보도, 여타 후보에게 불리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어 경고결정.

【울산매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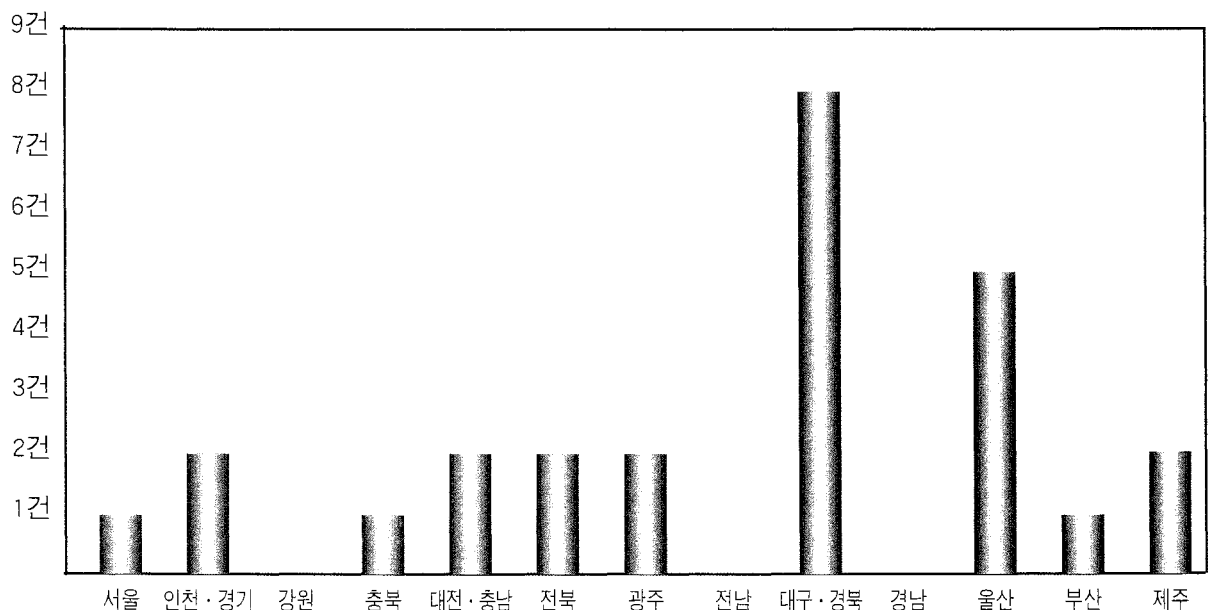
한나라당 서청원 대표가 박맹우 후보를 지원하는 정당연설회를 1, 2면에 걸쳐 사진과 함께 집중 보도 하면서, 경쟁자인 민주노동당후보에 대해서는 지지세력이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내용을 같은 날짜에 보도하여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으로 경고결정.

【전북일보】

강현욱 민주당후보가 경선에서 확정되자 1면 톱을 비롯 사실, 해설, 인터뷰, 만평 등을 3면에 걸쳐 마치 당선자처럼 보도하여 주의결정.

지방일간신문의 지역별 위반건수

<도표 1>



【충남일보】

3개월 전인 3월 27일 아산시장 선거 기사를 보도하면서 5~6명 정도 거론되고 있는데 특정인 2명을 집중거론, 『2파전 압축』이라는 제목을 달아 사진까지 게재해 주의결정.

【광주타임즈】

광주시장·전남지사 선거와 관련 후보자들에 대한 여론조사결과를 인용보도하면서 조사 당시 광주시장 후보 2명, 전남지사 후보 3명 모두 표본오차율 한계내에 분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후보 2명을 제목을 통해 '선두'로 부각시켜 주의결정.

【호남신문】

광주시장 후보예정자인 정동년 광주남구청장의 저서출간과 출판기념회 기사를 연이틀에 걸쳐 3개면에 집중 보도해 주의결정.

3. 시사주간지, 주간신문, 월간지, 통신

시사주간지 23종, 지방주간신문 299종, 월간지 5종이 심의대상이었다.

시사주간지의 경우 월요신문이 1건을 위반, 경고결정을 받았다. 기사내용은 인천시장후보인 안상수씨를 집중 부각시켜 공정성 및 형평성을 위반, 경고결정을 받았다.

월간지는 월간조선이 2건이었는데 3월호에 강원도와 경기도지사 선거관련 르포기사에서 한나라당 김진선(강원), 손학규(경기)가 후보로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누가 나와도 상대 안된다』(김진선), 『손학규의원 여론조사 1위』라는 제목으로 판세 기사를 다루어 주의를 받았다.

지방주간신문의 경우 대부분 특정 후보예정자를 부각시킬 목적으로 인터뷰 기사를 크게 보도한 사례가 많았으며, 경쟁 대상자는 의도적으로 인터뷰를 하지 않은 편파보도를 하였다.

제3장 심의대상기사의 위반 유형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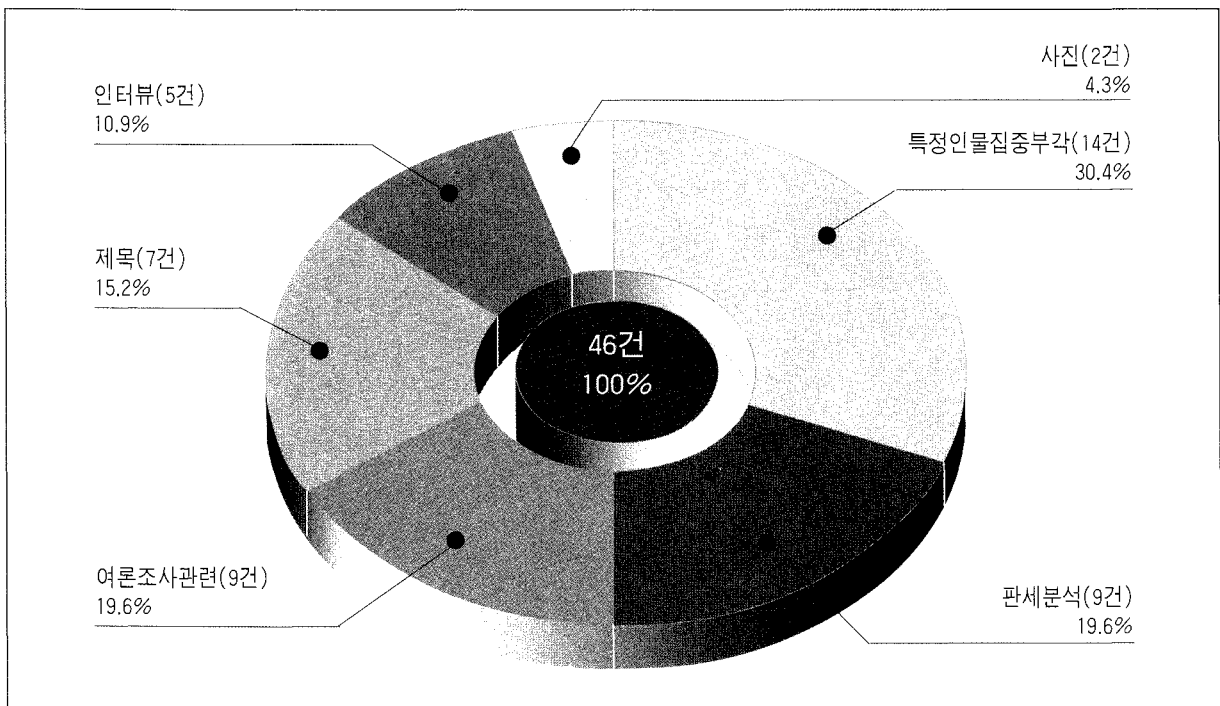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제재결정하면서 중점을 둔 것은 의도적으로 특정 후보를 부각시킨 내용이나 제목, 사진, 그리고 출처불명의 여론조사를 인용하여 특정 후보를 유리하게 하거나 불리하게 보도한 기사는 대부분 경고결정을 내렸다. 주의결정을 내린 경우는 주로 판세분석 기사에서 많았는데 선거초반부터 양자대결로 압축, 특정 후보를 간접 지원한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시기적으로 보면 초기(선거일 4~6개월 전)에는 주로 재출마 의사를 갖고있는 현직 단체장의 재임시업적을 좋게 평가한 내용을 상자기사로 다루었으며, 정당공천이 결정된 이후에는 지역정서에 따라 영남권신문은 한나라당후보, 호남권신문은 민주당후보, 충청권신문은 자민련후보를 집중 조명시켰다. 선거막바지에는 당선가능성이 높은 후보를 지원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심의위원회가 심의한 기사의 위반사례를 유형별로 세분하면 특정 인물 집중 부각이 1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판세분석을 통해 특정 인물을 유리하게 보도한 경우가 9건, 여론조사 인용보도를 통한 특정 정당후보 지원이 9건, 기사내용은 공정했지만 제목으로 특정 인물을 부각시킨 것이 7건, 특정 인물 집중 인터뷰가 5건, 타 후보보다 사진을 크게 편집하여 시선을 끌게 한 경우가 2건이었다. <도표 2>

유형별 위반기사 분포도

<도표 2>



1. 기사내용

가. 인물부각

선거기사에서 가장 많은 논란과 시비를 불러일으켰고, 비판을 받은 내용은 출마자의 인물평이었다. 인물과 관련된 기사는 예나 지금이나 특별한 기준 없이 언론사와 특별한 관계가 있거나 기자의 주관적 잣대에 따라 평가한 것이 관례처럼 되어있다. 따라서 인물관련 기사는 선거 때마다 피해당사자의 항의나 법적 대응이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선거기사 심의에서도 언론기관의 공정보도 의무와 공정성과 형평성 위반으로 많은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선거의 성격상 중앙일간신문 보다 지방일간신문이나 주간신문이 많은 지면을 할애하여 선거 기사를 다루었는데 언론사와 후보, 취재기자와 후보간의 친소관계에 따라 기사의 비중이 정해진 사례도 적지 않았다.

【경상일보의 경우】

선거초반부터 한나라당후보와 민주노동당후보의 격전지로 전국의 관심을 모았던 울산광역시에서 경상일보는 2월 27일 한나라당 시장후보 경선 주자인 강길부씨의 출판기념회를 3면에 상자기사로 사진과 함께 크게 보도하면서 『선거출정식 방불』, 『큰 격려에 용기 시장경선 압승 자신』이라는 제목과 함께 경남·울산지역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의 절대적 지원을 받는 것처럼 기사를 썼다. <경고>

그리고 한나라당 시장후보로 강길부씨가 아닌 박맹우씨가 확정되자 4월 2일자 신문의 1면과 3면에 걸쳐 후보당선 배경과 포부 등을 집중 보도했다. 특히 사실을 통해 본선 승리를 위한 방법론까지 제시하기도 하였다. <주의>

【울산매일의 경우】

선거를 19일 앞둔 5월 25일 한나라당 박맹우 후보에 대해 『행정경험 박맹우 후보 우위』라는 제목을 달아 1면 머릿기사로 보도했으며, 2면에는 박후보의 출판기념회를 상자기사로 사진과 함께 실었다. <주의>

이어 선거 7일 전인 6월 6일 신문에서는 한나라당 서청원 대표 정당연설회를 2개면에 걸쳐 사진과 함께 집중 보도한 반면, 경쟁자인 민노당 송철호 후보에 대해서는 『지지후보 갈라진 한노총』, 『노총 지지후보도 연계 거부감 표출』 등의 제목을 달아 지지세력의 분열양상을 보도하였다. <경고>

【호남신문의 경우】

광주광역시에서 발행하는 호남신문은 광주시장 입후보예정자인 정동년씨(남구청장)의 출판기념회 관련 기사를 연이틀에 걸쳐 3개면에 집중 보도해 언론사가 '사전선거운동'을 하는 느낌을 줄 정도였다.

이 신문은 3월 11일 3면에 지역정가소식을 단신기사로 처리하면서 『시민 신뢰받는 시장을』이라는 제목으로 '정동년의 광주시장론' 출판기념회 일정과 책 내용 일부를 소개한데 이어 같은 날 5면에 얼굴

사진이 크게 나온 책표지 사진과 함께 상자기사로 상세히 보도하였다. 또 3월 13일 3면에 출판기념회 행사 사진을 크게 실은 기사를 실었다. <주의>

【전북일보의 경우】

민주당 전북지사 경선에서 강현욱 후보가 35표차로 당선되자 전북일보는 5월 8일자 신문에서 1면 톱(스트레이트), 2면(사설, 해설, 인터뷰), 3면(해설, 만평) 등 3개면에 걸쳐 특집으로 엮었다.

지역여론을 고려할 때 지방일간신문으로서는 당연한 기획 편집이라 할 수 있으나 경선 결과 분석기사에서 『도지사 경험 ‘검정된 인물’ 강점』, 『풍부한 경륜이 높은 평가받아』라는 제목을 달았고, 인물평 기사에서는 “정렴성·포용력 겸비한 덕장”, “이론·실무 두루 섭렵한 정통 경제관료”, “관선지사·장관 등 역임 화려한 경력”이라고 격찬하여 너무 과장된 보도라는 지적을 받았다. <주의>

【대구일보의 경우】

선거일이 무려 4개월이 남은 시점인 2월 16일 대구일보는 경북 군위군수와 의성군수 선거 기사를 보도하면서 ‘현직 군수의 재당선이 거의 확정적’이라고 단정하였다. 군위군의 경우 무소속이었던 박영언 군수가 한나라당에 입당함으로써 재선이 확실시된다는 내용의 기사를 실었으며, 의성군은 정해걸 현 군수가 3선을 향해 달리고 있다며 『정군수 경쟁자 없다』는 제목과 함께 “2선 연임하는 동안 리더십이 뛰어나고 추진력이 강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주의>

나. 판세분석

선거기사에서 판세분석은 어떤 유형의 기사보다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것은 판세 분석기사가 유동층 유권자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주어왔기 때문이다. 선택할 후보를 미처 결정하지 못한 유권자들의 일반적인 속성은 당선가능성이 높은 후보를 찍는 경우가 많아 후보 당사자는 물론 참모들까지 판세분석 기사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러한 선거분위기 때문에 취재기자들은 인터뷰나 여론조사기사와는 달리 내용이나 분량, 사진크기, 제목 등에 신중을 기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후보들을 모두 등장시켜 공약이나 경력, 지지세력 등을 소개해야 하기 때문에 신문사에서도 후보자의 항의나 법적 대응 등을 고려한 형평성과 공정성에 중점을 두어 편집하려고 노력한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과거와 달리 판세분석기사의 위반사례가 줄어들긴 했으나 일부 신문사에서는 아직도 편파적인 보도가 없지 않아 위반기사의 19.6%인 9건이 주의결정을 받았다.

대표적인 위반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매일경제의 경우】

4월 25일 서울을 제외한 전국 광역단체장 후보예정자들에 대한 판세를 분석·보도하면서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특정 후보들을 소개하면서 독무대, 독주, 당선확률 거의 100%, 2파전 등의 제목을 달았다.

충남지사선거의 경우 『자민련 심대평 현지사 외에는 경쟁상대가 없는 상태』, 『심대평 현지사 독주에 상』이라는 제목까지 실었다.

충북지사는 『이원종 당 이적 불구 강세』라는 제목과 함께 “당적 변경시비에도 불구하고 최근 지방언론사들의 여론조사에서 이지사는 압도적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하였다.

경남지사는 김두관 남해군수가 자치연대 후보로 출마를 선언했는데도 『김혁규지사 독무대 예상』이라는 제목과 함께 김지사 사진만 실었다. 부산, 대구, 경북지사 선거도 한나라당후보의 사진만 게재했을 뿐이며 기사내용에서도 다른 후보예정자들은 소개하지도 않았다. <주의>

【영남일보의 경우】

3월 13일부터 3월 19일까지 5차례에 걸쳐 지역정가 소식란을 통해 대구, 경북지역의 광역과 기초단체장 판세를 분석하면서 한나라당후보의 동정과 공천결정 사실만 집중적으로 보도했다. 지역적인 선거분위기를 사실대로 전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공천탈락자들의 무소속출마 사실마저 묵살한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었다. <주의>

【대구일보의 경우】

영남일보와 마찬가지로 대구일보도 3월 14일부터 20일까지 6차례 대구·경북지방 기초단체장 초반 선거분위기를 3면에 보도하면서 모두 30개 지역의 판세를 단신으로 처리했는데 모두 한나라당후보 공천 상황만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물론 민주당후보 희망자가 없어 부득이한 보도라고 할 수 있겠으나 처음부터 무소속을 선언한 후보들이 있었는데도 취재대상에서 제외시킨 것은 공정성을 도외시킨 편집이었다. <주의>

다. 인터뷰

인터뷰기사는 종합일간신문의 경우 주로 정당공천이 확정된 후나 후보등록이 끝난 다음 시리즈를 통해 후보들의 정책이나 공약, 인생관 등을 보도하는 것이 관례처럼 되어있는데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예외는 아니었다.

중앙지나 지방일간신문의 인터뷰기사는 사진이나 제목, 질문내용에서 특정 후보를 의도적으로 부각시키거나 불리하게 보도한 사례가 1건도 지적되지 않아 눈길을 끌었다.

일간신문과는 달리 시사, 지역주간신문은 6건의 인터뷰기사가 모두 경고결정을 받았다. 위반주간신문들은 모두 시리즈기사처럼 보도하면서 특정 후보 한 사람만 부각시켰을 뿐 다른 후보들은 아예 묵살하였다.

【월요신문의 경우】

선거일을 불과 4일 앞둔 6월 9일 발행한 6월 16일자 신문(주간신문은 발행일보다 6~7일전 배포)에서 한나라당 인천시장 안상수 후보를 2개면에 걸쳐 인터뷰, 프로필, 사진 4장을 게재하면서 집중 부각시켰다.

인천시장 선거는 한나라당, 민주당, 녹색평화당, 민주노동당, 사회당후보 등 모두 5명이 출마했는데 다른 신문들은 한나라당 안상수 후보와 민주당 박상은 후보가 치열한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보도하였다.

‘릴레이 인터뷰’라고 소제목을 달았으나 안후보 외에는 인터뷰 기사를 실은 적이 없었다. 질문내용도 주로 안후보의 약점을 적극 해명할 수 있는 문제를 다루었으며, 정책보다 개인신상 답변에 많은 지면을 할애하였다. 질문 중에는 “부인께서 오랫동안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힘드신 부분은 없느냐”는 물음으로 외병 중인 부인의 근황을 상세히 전해 독자들의 동정심을 유발시키도록 하였으며, 민주당 후보가 제기한 의혹에 대한 해명은 1개면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였다. <경고>

주간신문의 경우 선거일 직전에 월요신문과 같은 보도를 한다면 동일 매체에 대한 다른 후보들의 반론보도 요청이 있더라도 선거 후에 다룰 수 밖에 없음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2. 제 목

제목은 기사내용을 압축시켜 한정된 글자수로 달아야 하기 때문에 때로는 기사내용보다 과장, 축소되는 경우가 있으며, 편집기자의 주관적 판단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

독자들의 시선을 끌면서 감정을 자극시키는데는 제목이 1순위가기 때문에 선거기사에서 제목이 갖는 파급효과는 엄청나다. 왜냐하면 기사 본문은 읽지 않고 제목으로 전체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는 독자들이 많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목으로 특정 후보를 부각, 폄하시키는 사례가 많다.

가. 특정 후보 이름 부각

선기기사심의위원회가 두 번째 회의(2월 22일)에서 첫 번째로 주의결정을 내린 것은 내일신문 2월 14일자 3면의 제목이었다. 이 신문은 선거일이 무려 5개월이나 남은 시점인데도 경기도지사 선거관련 기사를 보도하면서 『한나라당 손학규 독주태세』라는 제목을 달았다. 기사내용은 한나라당 공천경합에서 손학규 후보가 독주태세라고 썼지만 독자들에게는 도지사 선거전에서 손학규 후보가 독주하는 듯한 인식을 주었다. <주의>

월간조선은 3월 초에 경기도지사선거 판세를 집중 보도하면서 조사기관, 조사방법, 조사지역, 일시 등을 밝히지 않은 부정확한 여론조사내용의 기사를 근거로 『한나라당 손학규의원 여론조사 1위 질주』라는 제목을 달았으며, 민주당 후보에 대해서는 『임창렬지사 민주당 공천 받을지가 관심』이라는 제목을 같은 크기로 나란히 편집하였다.

월간조선 3월호는 또 강원도지사선거 판세 보도에서도 한나라당 김진선 후보측이 “누가 나와도 상대

가 안될 것”이라고 주장한 내용을 그대로 제목으로 뽑았다. <각 건 주의>

주간신문 강원리뷰(5월 20일~26일자)의 판세분석 제목은 김진선 지사의 홍보물을 연상케 하였으며 강원도 내 영동·영서의 지역감정을 조장하였다. 큰 제목은 『김지사 재선 영동권 단결 한 목소리』였으며, 작은 제목은 『영동지역민 응집력 보여 영동지역의 힘을 보여줘야 할 때』, 『얼마만큼 김지사를 몰아주느냐와 원주권의 표심 향배 관련』이라고 달았다. <경고>

광주타임스의 경우 경선 후보자들에 대한 여론조사결과를 인용보도하면서 조사 당시 후보자들에 대한 지지도가 모두 표본오차를 한계 내에 분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주시장 이정일·전남지사 박태영씨 선두』라는 제목을 1면 톱으로 달았다. <주의>

나. 특정 정당 부각

대통령선거나 국회의원선거에서도 지역주민정서에 편승해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간접 지원하려는 편입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지방선거의 경우는 과거에도 그랬듯이 지나칠 정도였다. 특히 지방일간지나 주간지에서 정도가 지나친 보도가 눈에 띄었다.

언론이 지역감정에 편승 특정 정당에 치우친 보도를 하는 것은 특정 정당을 지원한다기 보다 독자들의 정치적 성향을 고려한 판매확장, 즉 부수 늘리기나 현상유지를 위한 조치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예를 들어 영남지역 신문은 한나라당과 후보에 대해 집중 보도를 하였으며, 반대로 호남지역 신문은 민주당을 부각시킨 사례가 많았다.

2월 25일자 경북매일의 경우 선거초반부터 『한나라 공천 따라 무투표당선』이라는 제목을 달았으며, 영남지방 신문들의 대부분이 '한나라당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보도를 하였다.

호남지역 신문들 역시 민주당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보도를 했는데 선거결과는 무소속 당선자가 많아 오보를 한 지역도 있었다.

3. 여론조사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심의·결정한 여론조사관련 보도 가운데 위반기사는 여론조사 보도요건 미비가 11건, 여론조사결과 보도금지 2건 등 13건이었다. 그중 경고결정이 3건, 주의결정이 10건이었다. 위반기사 가운데 절반이 넘는 7건(경고3, 주의4)이 중앙일간지였다는 사실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여론조사결과 보도 위반은 주로 여론조사 필수요건을 적시하지 않은 보도요건 미비가 11건이었으며, 결과 보도금지 위반은 2건으로 나타났다.

관련법규에 명시되어 있는 여론조사결과 보도의 요건은 조사의뢰자, 조사기관,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 일시, 표본오차율, 응답률, 질문내용 등이다.

선거분위기가 고개를 들게 되면 대부분의 언론사에서는 나름대로 적절한 시기에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하여 그 결과를 몇 차례에 걸쳐 보도하는데 횟수는 언론사 사정에 따라 결정하고 있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대선후보 경선과 겹친 탓에 중앙일간신문의 경우 각 정당의 대선후보와 관련된 여론조사가 많았다. 따라서 지방선거에 대한 중앙일간신문의 여론조사는 극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그것도 광역단체장 후보에 국한되었다. 이러한 여건 때문에 중앙일간지의 지방선거 여론조사 보도는 지방일간지 여론조사결과를 인용할 수밖에 없었는데 ‘지역신문 여론조사에 따르면’, ‘현지언론 여론조사 결과’, ‘최근 지역신문 여론조사’라는 애매한 표현을 사용해 관련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가. 보도요건 준수 위반

조선일보는 5월 25일자 8면에 전국 기초단체장 지방선거 판세를 특집으로 다루면서 강원 춘천시장과 충북 청주시시장선거 기사에서 “최근 지역신문 여론조사에 따르면”이라는 표현을 썼으며<주의>, 세계일보는 2월 22일자 기자칼럼에서 최기선 인천시장의 정치 행보를 비판하면서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최시장은 한나라당 후보에게 뒤지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하였다. <경고>

한국경제는 5월 22일자 8면에 부산시장 선거를 상자기사로 보도하면서 “현지 언론의 여론조사결과는...”이라고 인용했으며<주의>, 경상일보의 경우 울산시장선거 보도(4월 23일)에서 울산 MBC여론조사와 울산방송 여론조사결과를 인용하면서 준수요건을 전혀 갖추지 않았다. <주의>

이러한 사례 외에 각 정당이 내놓은 여론조사 자료를 근거로 “OO당의 자체 분석결과”라는 보도도 적지 않았지만 선거에 영향을 줄만한 내용이 아닌 것은 불문으로 처리되었다.

여론조사 보도요건을 충분히 갖춘 기사라 할지라도 오차범위에서 1~2%정도 앞서거나 뒤진 결과를 놓고 “크게 앞서”, “크게 뒤져”, “오차범위 벗어나” 등의 다분히 의도성있는 제목을 달아 특정후보를 유리하게 한 경우도 있었다.

나. 결과보도 금지 위반

6·13지방선거는 관련법에 따라 선거 15일전인 5월 28일 이후부터 선거당일 오후 6시 이전까지 여론조사결과를 보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조항을 위반한 사례는 조선일보와 세계일보 2건뿐이었다.

선거기사심의위는 자체심의에서 이들 두 신문사가 관련법규를 충분히 알고 있으면서 보도했다는 점을 지적, 2건 모두 경고결정을 내렸다.

조선일보는 5월 29일자 5면에서 격전현장 1번으로 울산시장 선거를 보도하면서 출처불명의 여론조사결과를 토대로 “이곳의 한나라당 정당지지도가 40.9%(민주당12.3%, 민주노동당7.4%)로 압도적인데도...,”라며 특정 정당의 지지도 우위를 보도하였다.

세계일보의 경우 6월 3일자 9면에서 서울, 경기, 대전, 울산의 광역단체장 중반 판세를 점검하면서 “현재 서울시장 판세는 한나라당 이명박, 민주당 김민석 후보가 오차범위 내에서 경합 중이다”, “대전

시장 선거는 한나라당 염홍철 후보와 자민련 홍선기 후보가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을 거듭하고 있어 예측 불허 양상이다”, “울산은 한나라당 박맹우, 민노당 송철호 후보의 양강구도이지만 송후보가 각종 여론조사에서 우위를 보이고 있다”는 등 출처불명의 여론조사결과를 인용·보도하였다.

4. 사 진

이번 기사심의에서 사진보도가 불공정 사례로 지적 받은 것은 1건에 불과했으나 일부 지방신문이 특정 후보, 특정 정당의 행사 사진을 크게 보도한 사례도 적지 않았다.

특히 관세분석기사나 후보예정자 기사를 다룰 때 특정 정당의 후보 인물 사진만 게재하고, 무소속후보들의 사진은 실지 않은 편집이 많았다.

사진의 불공정 사례는 인터뷰 기사를 시리즈로 다룰 때 특정후보 인물사진은 크게, 다른 후보 인물사진은 작게 실는 경우가 간혹 발견되었는데 대체적으로 동일한 크기로 보도하였다.

사진으로 특정 후보를 부각시킨 사례는 대구일보의 경북지사 관련 기사가 대표적이었다. 대구일보는 5월 29일 4면에 대구시장과 경북지사 선거 기사를 실었는데 한나라당후보인 이의근 경북지사의 인물 사진과 후보등록사진을 게재한 반면 경쟁관계에 있는 후보의 사진은 아예 다루질 않았다. <주의>

서울에서 발행하는 시사주간지 월요신문도 한나라당 인천시장후보 인터뷰 기사를 2개면에 걸쳐 보도했는데, 1개면은 가로 8.5cm, 세로 10.5cm의 인물사진 외에 또 다른 스냅 인물사진, 다른 면에는 소속정당 행사 사진을 2장이나 실었다(인천시장후보는 모두 4명이었는데 월요신문은 안후보만 인터뷰 함). <경고>

